

“철저한 수사로尹 파면 절차 신속 진행해야”

●광주·전남지역사회반응

姜시장 “응원봉 시민 민주주의 지켜”…金지사 “사필귀정” 오월·시민단체 “내란 가담자도 수사”…국힘 해체 요구 민주 광주시당 “민주주의 파괴한 응분의 대가 꼭 치를 것”

내란 수괴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전남 지역사회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직후 페이스북에 “법 앞에 ‘더 평등’했던 대통령이 드디어 체포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강 시장은 “응원봉 시민이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을 지켜낸 것”이라며 “이제 다시 시작이다. 탄핵과 내란 가담자 처벌,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자”고 신속한 처벌을 요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 드디어 체포, ‘사필귀정’이 딱 맞는 말이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해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며 “국가의 체통을 지켰다”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체포에 앞서 사전 자진출두를 했어야 마지막 명예도 지키지 못한 비겁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제 국민배반 행위의 최종 결과는 현재 파면과 구속 뿐”이라고 촉구했다.

오월 공법 3단체(5·18민주화운동 부상·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 기념재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법 집행은 정의와 법치의 회복을 위한 시작”이라며 “오월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정의롭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광주비상행동은 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는 국민의 승리”라며 “공공연하게 내란을 정당화하며 발악하고 있는 국민의 힘은 즉각 해제하고 내란 가담자들은 모두 처벌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심판을 조속히 진행해 파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광주송정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김재리 기자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광주시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됐다”며 “이는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환호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며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

해 준 것”이라며 “공수처는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단죄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환영 성명을 통해 “경호처를 방패삼아 법 집행을 불법적으로 거부한 내란 수괴 윤석열은 죄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윤석열이 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현재의 탄핵 인용

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내란 죄 혐의가 있는 대통령은 특별한 처우를 요구하려 들지 말고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비호하며 선동을 일삼는 여당 내 인사들과 비상계엄 선포 수사 선상에 있는 관련자들 역시 더 이상의 선동

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 광주본부 “시민의 응원봉이 눈보라 속에서도 희망의 불빛을 만들며 기어오르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며 “윤석열 구속·처벌과 파면, 국민의힘 해체를 위해 형형색색 응원봉 불빛을 모아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김재정·변은진·주성학 기자

尹, 공수처 조사 마치면 서울구치소 독방 구금 전망

구속영장 청구서 구인피의자거실 대기…발부시 독방 배정 조국·윤관석과 함께 수용…박근혜·이명박은 3평대 독방에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체포 시점으로부터 4시간 이후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

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으로, 통상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으로 볼 수 있다. 12·3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달 8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물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

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경호·경비와 예우 수준을 내부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흔거실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게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는 독거수용되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수형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해 흔거수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인 점, 앞서 교정시설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고려해 독방에 배정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도 3평대 독방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가 수사한 정지인,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가는 곳이라 ‘범털(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수용자를 지칭하는 은어) 집합소’로 불린다. 서울구치소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수용돼 있다. /연합뉴스

尹 진술거부권 행사…수사 협조 안해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30분가량 이어진 오전 조사에서 이재승 차장검사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조사 상황과 관련해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기준 입장에 따라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남은 조사에서도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에 응할 의무가 없고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측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뒤에도 “위헌·위법한 영장”이라며 “불법 수사”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알고당사다

개인형이동장치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 01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범칙금 10만원
- 02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범칙금 4만원
- 0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04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범칙금 10만원
- 05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한국도로교통공단 KOREAD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